

북한 인권 논쟁과 공론장 양극화 : 정보 왜곡과 정파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 주 희*

•요 약•

본 연구는 북한 인권을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서 정보 왜곡과 정파적 갈등이 공론장 양극화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심화시키는지 분석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자체로 양극화를 초래한다기보다, 관련 정보가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프레임을 거쳐 해석되고, 발화자의 의도와 정체성을 문제 삼는 메타담론으로 전환되어 반복적으로 유통될 때 정서적 양극화를 증폭시킨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공론장, 정보 무질서,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논의를 결합하여 이러한 작동 경로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북한인권 보고서와 대북정책 인식 논쟁, 탈북민 증언의 수용·검증 논쟁, 국제기구 인권보고서의 국내 정치적 번역이라는 세 가지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안보화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가의 생존과 위협의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도덕화는 정책 선택의 차이를 선악과 정의의 문제로 변환하는 과정, 정파화는 이러한 판단이 특정 정당과 이념집단의 정체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 세 메커니즘이 중첩될 때 정책적 이견은 대안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도덕성과 발화 자격을 부정하는 정체성 갈등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다기관 사실검증, 맥락정보와 원자료의 연계, 플랫폼 절차의 투명성, 공적 반론권, 시민적 미디어 리터러시, 북한 인권 의제의 탈정파화를 결합한 공론장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어 : 북한 인권, 공론장 양극화, 정보 왜곡, 정파적 갈등, 정서적 양극화

I. 서론

북한 인권은 국제정치, 비교정치, 인권정치가 교차하는 복합적 의제이다. 이 의제는 북

* 고려대학교 정치학(비교정치학) 박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 생존권, 이동의 자유, 정치적 참여 가능성, 국가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보편적 권리의 언어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실제 장면에서 북한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는다. 분단체제와 국가안보의 역사, 정당 경쟁, 대북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둘러싼 견해 차이, 시민사회 내부의 노선 경쟁이 중첩되면서 북한 인권은 하나의 정책의제를 넘어 특정 진영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판정하는 정파적 갈등의 장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 결과 공론장은 북한 주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기보다 어느 진영이 더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국가와 인권의 가치에 충실한지를 둘러싼 정체성 대결로 이동하기 쉽다.¹⁾

북한 인권 논쟁의 역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반드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둘러싼 실질적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오히려 인권을 말하는 행위가 국내 정치적 충성심과 도덕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때, 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권리는 논쟁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더욱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 온라인 공간은 다양한 증언과 국제기구 자료, 연구보고서, 정책문서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동시에 긴 문서에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된 인용, 선택적으로 편집된 영상, 출처가 불분명한 도표, 자극적인 제목과 감정 유발형 요약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왜곡도 손쉽게 유통되도록 만들었다. 북한 인권과 같이 사실 확인 비용이 크고, 안보적 위협 인식 및 도덕적 분노와 쉽게 결합하는 이슈에서는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용자는 원자료에 직접 접근하기보다 이미 요약되거나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된 콘텐츠를 먼저 접하게 되며, 해당 콘텐츠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부합할수록 이를 신뢰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커진다.²⁾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개별 정보의 단순한 참·거짓 여부만이 아니라, 정보가 어떠한 맥락과 정파적 해석을 통해 유통되는가의 문제이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정보환경에서는 특정 사실을 둘러싼 이견이 곧바로 발화자의 인격, 의도, 국가관, 인권감수성에 관한 판정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 왜곡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발화 자격을 약화시키며 집단 간 정서적 거리를 확대하는 정치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1) 북한 인권 논쟁은 국제인권 규범의 수용과 남북관계의 변화, 정당 간 전략적 경쟁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이를 대북정책의 하위 범주로만 다루거나 순수한 인권 규범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접근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 공론장에서 해석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2) 정보 수용 과정에서 발신자 정체성과 감정 프레임의 중요성은 디지털 정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북한 관련 이슈는 애국심과 안보 위협 인식, 도덕적 분노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 자신의 정치적 진영에 대한 정서적 동일시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맥락 역시 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제도적 경쟁의 정례화와 시민사회의 확대를 통해 공고화의 경로를 걸어왔지만, 대결적 정치문화와 취약한 정당 매개, 강한 대통령제, 대표성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제도적 민주화의 성취가 숙의적 공론장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안보와 통일이 결합한 쟁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 인권 담론은 보편적 가치와 현실정치의 전략적 계산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긴장을 농축하여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북한 인권 논쟁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안보화·도덕화·정파화되는가. 둘째, 맥락 삭제와 과잉 일반화 같은 정보 수준의 왜곡과 검증되지 않은 의도·배후 추정 같은 해석 수준의 왜곡은 어떻게 발화자의 동기와 자격을 문제 삼는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되는가. 셋째, 이러한 담론적 전환이 초래한 공론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북한 인권 의제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시민사회적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공론장, 시민사회와 항의의 정치,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보 무질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북한 인권을 둘러싼 세 가지 반복적 논쟁 장면을 탐색적 질적 사례로 분석한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공론장 양극화를 자동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프레임에 거쳐 해석되고, 플랫폼의 주목 구조 속에서 메타담론으로 증폭될 때 정파적 갈등과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다시 말해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해당 주장이 국내 정치에서 어떠한 정파적 언어로 번역되고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감정적으로 확산되는가에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순한 검열과 무대응의 이분법을 넘어, 공통의 사실기반과 절차적 투명성, 반론 가능성, 시민의 비판적 정보 해석 역량을 결합하는 대안적 구조가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북한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북한 인권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정부별 정책 기조의 차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역할, 탈북민 증언의 신뢰성과 재현 문제를 중심으로 축적되

3) 임혁백. 2011.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3김 정치시대와 그 이후』,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인권 의제가 국내외 정치 과정에서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양상과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관한 사실과 자료가 국내 공론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해석되고, 발화자의 정치적 의도와 정체성을 문제 삼는 메타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정보와 맥락의 왜곡, 정파적 프레임, 디지털 플랫폼의 주목 구조가 결합하여 정책적 이견을 정서적·정체성 갈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북한 인권 담론의 정치화와 공론장의 규범적 조건, 시민사회와 항의의 정치, 정보 무질서와 메타담론, 플랫폼화된 공론장의 주목 구조에 관한 논의를 차례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관련 정보가 정파적 의미를 획득하고 공론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관점을 구성하고자 한다.

1. 북한 인권 담론의 정치화와 공론장의 규범적 조건

북한 인권을 둘러싼 한국의 논쟁을 이해하려면, 인권 의제가 어떠한 조건에서 정치화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화 자체는 부정적 현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권의 침해를 공적 의제로 만들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문제는 정치화가 정책 대안과 책임의 논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상대의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배제적 판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가에 있다. 북한 인권은 후자의 위험이 큰 의제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 정보 접근의 제약, 남북관계의 안보적 긴장, 탈북민 증언과 국제기구 자료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결합하면서,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곧바로 정치적 불신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인권은 일반의사와 부분의사의 긴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의제다. 인권의 보편성은 특정 집단을 넘어서는 공적 판단을 요구하지만, 실제 정책은 제재·관여·교류·정보 유입·국제 공조와 같은 비용 및 전략의 선택을 수반한다. 이러한 긴장 자체는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과제는 보편적 원칙과 부분적 이해관계를 서로 제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로 표상될수록, 일반의사는 부분의사의 무기가 되고 정책적 복잡성은 도덕적 이분법에 의해 지워진다.⁴⁾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는 공적 토론이 강제 없는 의사소통과 이유 제시를 통해 정당

4) 임혁백, 2009a,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4호, 한국정치학회, 27-49; Dahl, Robert A.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규범적 기준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의 공론장은 권력, 정서, 정체성, 그리고 디지털 매체 구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북한 인권과 같이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실 검증이 어려운 의제에서는, 논거의 경쟁보다 발화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경쟁이 앞서기 쉽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공론장의 민주적 질을 단순히 합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이 상대의 발화 자격을 전면 부정하지 않은 채 근거와 맥락을 제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으로 규정하고자 한다.⁶⁾

이러한 관점은 북한 인권 논쟁을 ‘인권 대 안보’ 또는 ‘압박 대 관여’의 단순 대립으로 환원하지 않게 한다. 실제 논쟁은 보편적 인권, 평화와 안전, 국제규범, 대북정책의 실효성, 탈북민의 경험, 국내 정치적 책임이 뒤섞인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정책 선호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호가 어떠한 근거와 조건 아래 제시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토론 규칙을 확보하는 일이다.

2. 시민사회, 향의의 정치, 그리고 북한 인권 의제

한국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는 제도 정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핵심 행위자였다.⁷⁾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역시 탈북민 지원, 기록화, 국제연대, 인도적 지원, 정보 유통, 정책 감시를 통해 공적 의제 형성에 기여해 왔다.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국가나 정당의 계산에 의해 주변화되기 쉬운 북한 주민의 권리를 가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은 북한 인권 의제를 공론장에 유지하는 민주주의적 자산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공론장의 질을 자동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는 정치적·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하며, 특정 정당 또는 이념적 연합과 전략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플랫폼 환경에서는 조직의 복잡한 내부 논쟁이나 세부 정책 제안보다, 강한 정서적 휘발성과 상징을 담은 메시지가 더 넓고 빠르게 유통되기 쉽다.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지워지고 가장 대립적인 표현이 전체 조직 또는 전체 진영의 대표 언어처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향의의 정치는 제도 정치가 수렴하지 못한 요구를 가시화하는 민주적 에너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상호 배제적 도덕화와 결합할 경우 협상 가능한 상대를 적으로 구성하는

5) Habermas, Jürgen.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ambridge: MIT Press.

6) Young, Iris Marion.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 임혁백. 2009b.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OUGHTOPIA』, 제24권 1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 137-169.

경로가 되기도 한다.⁸⁾ 북한 인권 의제에서 이중성은 중요하다. 한편으로 공개적 문제 제기와 비판은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을 교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대의 유보적 입장이나 정책적 우려를 곧바로 체제 옹호, 인권 외면, 안보 위협으로 번역할 때 공론장은 정책 논쟁의 공간을 잃는다. 따라서 시민사회 연구는 공공성의 재구성 가능성과 함께 조직화 방식, 매체 활용 및 주목 획득 전략, 반론 수용의 규칙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⁹⁾

3. 정보 무질서, 메타담론, 정서적 양극화

허위·조작정보를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로만 정의하면 북한 인권 담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당 부분을 포착하기 어렵다. 정보 무질서의 관점은 완전한 날조뿐 아니라 오해를 유도하는 편집, 사실 일부의 과장, 맥락의 삭제, 검증되지 않은 배후 추정, 감정적 제목과 이미지의 결합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다.¹⁰⁾ 이는 모든 오류나 논쟁적 해석을 허위정보로 규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민주적 공론장에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정책적 판단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특정 정보가 반증 가능성, 출처의 명료성, 맥락의 충실성, 불확실성의 인정, 반론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시민의 숙고 과정을 방해하는가에 있다.¹¹⁾

본 연구는 북한 인권 담론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세 층위로 구분한다. 첫째, 정보 수준의 왜곡은 허위 사실, 선택적 인용, 맥락 삭제, 사례와 수치의 과잉 일반화를 포함한다. 둘째, 해석 수준의 왜곡은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나 배후를 단정하거나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셋째, 관계적 메타담론은 주장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 발화자의 동기와 정체성을 공격하고 발화 자격을 부정하는 담론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 세 층위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 논쟁에서는 정보와 해

8) 최장집.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9) 임혁백. 2007.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향의의 정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0권 3호, 아세아문제연구소, 128-148.; Entman, Robert M., 2004. *Projections of Power: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학계에서는 이를 의도적인 기만 없이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인 오정보(misinformation), 기만의 의도를 가진 허위정보(disinformation), 실제 정보를 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로 세분화한다. 북한 인권 담론은 이 세 가지 층위가 복잡하게 얹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재단할 수 없다.

11) Wardle, Claire, and Hossein Derakhshan.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Making*,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Tucker, Joshua A., Andrew Guess, Pablo Barberá, Cristian Vaccari, Alexandra Siegel, Sergey Sanovich, Denis Stukal, and Brendan Nyhan. 2018. “Social Media, Political Polarization, and Political Disinformation: A Review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Hewlett Foundation Working Paper.

석의 왜곡이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되면서 정파적 갈등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 인권 담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관계적 메타담론의 작동 방식이다. 메타담론은 어떤 사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1차 정보가 아니라, 누가 그 사실을 말하는가, 왜 지금 이 사실이 제기되는가,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를 둘러싼 해석의 틀이다. 메타담론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도덕적 도식으로 압축한다. 예컨대 정책적 유보를 인권의 부정으로, 증언 검증을 탈북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외세 의존으로, 평화적 관여의 주장을 체제 옹호로 동일시하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토론의 대상은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상대 집단의 도덕적 정당성으로 치환된다. 이러한 메타담론은 이용자가 자신의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려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과 결합할 수 있다.¹²⁾ 결국 논쟁은 사실 그 자체보다 해당 사실을 매개로 상대 진영의 위선을 입증하는 메타담론의 서사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책 선호의 거리보다 상대 집단을 향한 불신, 혐오, 회피의 감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¹³⁾ 북한 인권 논쟁에서 상대는 단순히 다른 정책을 선호하는 시민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도구화하는 도덕적 타자로 묘사되기 쉽다. 허위·조작정보는 이때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라기보다 상대 집단 전체를 비정상화하는 상징 자원으로 소비된다. 결국 공론장은 사실 판단과 정책 대안의 장에서 정체성 재확인 의 장으로 이동한다.

4. 플랫폼화된 공론장과 주목의 경제

디지털 플랫폼은 공론장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주목의 분배 방식을 재편한다. 이용자는 긴 보고서나 원문보다 짧은 영상, 카드뉴스, 자막 요약, 댓글 요약, 공유 문구를 먼저 접한다. 플랫폼의 추천과 확산 구조는 모든 콘텐츠에 동일한 가시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반응과 체류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더 주목을 받는 구조적 경향성을 지닌다. 이 환경에서 복잡한 설명, 불확실성의 인정, 조건부 정책 제안은 감정적 확신과 도덕적 단정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도덕적 격분과 위협 인식을 자극하는 표현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설명이나 조건부 정책 제안보다 빠르게 공유될 수 있다. 그 결과, 차분한 정책적 타협안보다는 선명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자극적 편집본이 플랫폼 공론장의 주목 경

12) Sunstein, Cass R. 2017.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디지털 뉴스 이용과 신뢰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플랫폼이 특정 정치적 결론을 일방적으로 생산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보다 타당한 설명은 플랫폼이 기존의 정체성, 네트워크, 언론 환경, 조직 동원과 결합하여 특정 종류의 표현을 더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담론에서는 ‘누가 진실을 숨기는가’, ‘어느 진영이 위선적인가’와 같이 발화자와 동기를 문제 삼는 메시지가 복잡한 사실 설명보다 빠르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플랫폼 분석은 알고리즘의 비밀스러운 내부 작동을 추정하기보다, 메시지 형식, 반복 어휘, 반론의 가시성, 원자료 연결 여부, 댓글 상호작용과 같은 관찰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⁴⁾ 따라서 본 연구는 플랫폼의 비공개 알고리즘 자체를 추정하기보다, 공론장에 표출된 텍스트와 콘텐츠의 형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담론의 유통 양상을 분석한다.

북한 인권 관련 정보는 공론장의 규범적 조건, 시민사회와 정치행위자의 경쟁, 정보와 맥락의 선택적 구성, 플랫폼의 주목 구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정교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수준과 해석 수준의 왜곡은 발화자의 정치적 의도와 자격을 문제 삼는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되며, 정책적 이견은 상대 진영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판정하는 정체성 갈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¹⁵⁾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을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세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한다.

Ⅲ. 분석틀과 연구설계

1. 분석모형과 분석 명제

본 연구는 북한 인권 논쟁의 공론장 양극화를 개별 정보의 단순한 참·거짓 여부가 아니라, 정보와 맥락의 선택적 구성,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프레임, 발화자의 동기과 정체성을 문제 삼는 관계적 메타담론, 플랫폼화된 유통 환경이 결합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첫째,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건, 증언, 국제기구 보고서, 법률 및 정책 제안이 공적 의제로 제기된다. 이 단계에서 논쟁의 중심은 사실의 확인, 자료의 신뢰성, 정책수단의 효

14) Bakshy, Eytan, Solomon Messing, and Lada A. Adamic. 2015.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348(6239), 1130–1132; 오일석. 2024. “딥페이크(DeepFake)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왜곡과 대응 방안,” 『전략보고』, 26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유은식·김경미. 2023. “한국의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위기: 역사적 배경,” 『한국정치연구』, 제32권 4호, 한국정치연구소, 1–35.

과와 비용에 있다. 둘째, 제기된 사실과 정책 쟁점은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프레임을 거쳐 재해석된다. 안보화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가의 생존과 위협, 체제 방어, 대북정책의 강경성과 유화성의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도덕화는 정책 선택의 차이를 인권과 반인권, 정의와 부정의, 책임과 외면의 대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정파화는 이러한 안보적·도덕적 판단을 특정 정당이나 이념집단의 정체성과 결합하는 과정이다. 셋째, 프레임의 재구성 과정에서 정보 수준과 해석 수준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정보 수준의 왜곡에는 허위 사실, 선택적 인용, 맥락 삭제, 개별 사례와 수치의 과잉 일반화가 포함된다. 해석 수준의 왜곡에는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와 배후를 단정하거나, 불확실성을 은폐하고, 검증되지 않은 은폐·공모 서사를 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넷째, 정보 및 해석 수준의 왜곡은 주장 자체의 타당성보다 발화자의 동기, 정치적 소속, 충성심과 발화 자격을 문제 삼는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논쟁의 중심은 무엇이 사실이며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에서 누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 어느 진영이 더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를 판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분석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분석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 명제 1. 북한 인권 의제가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프레임을 중첩적으로 획득할수록, 논쟁의 초점은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정치집단의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명제 2. 맥락 삭제와 과잉 일반화와 같은 정보 수준의 왜곡이 검증되지 않은 의도·배후 추정과 결합할수록, 논쟁은 사실과 정책에 대한 반박에서 발화자의 동기와 자격을 문제 삼는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두 명제의 분석 여부는 추상적인 인상이나 특정 표현의 빈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명제 1은 각 사례에서 ① 사실 또는 정책수단에 관한 논쟁이 존재하고, ② 그것이 안보·도덕·정파적 의미로 재구성되며, ③ 최종적으로 정책의 효과보다 상대 진영의 안보관·도덕성·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전면화되는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명제 2는 ① 원자료의 일부가 선택되거나 맥락이 축소되고, ② 그러한 정보적 축약이 발화자의 정치적 의도나 배후에 대한 추정과 결합하며, ③ 그 결과 제시된 자료 자체보다 발화자의 신뢰성·동기·발화 자격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논쟁이 이동하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각 명제는 단일 문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실·정책 쟁점→프레임화 및 정보 왜곡→관계적 메타담론’이라는 연속적인 담론적 경로가 사례 안에서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이 명제들은 인과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검증 가설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사례에서 반복되는 담론적 경로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한 분석 명제이다. 반대로 원자료의 맥락과 한계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중심으로 논쟁이 지속되거나,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발화자의 자격을 부정하지 않고 근거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례는 명제가 충분히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분석 명제가 관찰되지 않는 조건도 함께 설정함으로써 사례를 사후적으로 명제에 끼워 맞추는 해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원자료와 맥락정보의 연계, 반론의 가시성, 불확실성의 인정이 관계적 메타담론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본 연구에서 직접 검증하는 별도의 분석 명제라기보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규범적·제도적 대응 방향으로 다룬다.

2. 분석 범주와 관찰 지표

분석 과정에서는 강한 정책 비판과 관계적 메타담론을 구분한다. 특정 정책의 효과, 비용,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근거로 비판하는 경우에는 표현이 강하더라도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자료의 불확실성, 조사방법의 한계, 증언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로 정보 왜곡이나 발화자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상대가 제시한 근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정치적 소속, 추정된 의도, 과거의 일부 행적만으로 현재의 주장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는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분류한다. 또한 반론이나 추가 자료를 기존의 은폐·공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시 해석하여 사실상 반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음모 서사형 해석으로 파악한다.

〈표 1〉 북한 인권 담론의 층위별 왜곡 및 메타담론 분석 지표

분석 층위	세부 유형	핵심 특징	주요 관찰 지표	공론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
정보 수준	완전 날조형	존재하지 않는 사건·발언·자료를 사실처럼 제시	출처 부재, 허위 인용, 검증 불가능한 수치	기초적 사실판단의 붕괴
정보 수준	맥락 삭제형	실제 자료의 일부만 분리하여 의미를 전환	원문 누락, 시간·조건 삭제, 편집 인용	반론 비용 증가, 잘못된 도덕적 판정
정보 수준	과잉 일반화형	개별 사례를 집단이나 시기 전체의 특성으로 확대	‘모두’, ‘본질적으로’, ‘항상’ 등의 총체화 표현	집단 간 정서적 거리 확대

분석 층위	세부 유형	핵심 특징	주요 관찰 지표	공론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
해석 수준	의도, 배후 단정형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정치적 목적과 배후를 단정	근거 없는 의도 추정, 검증되지 않은 인과 연결	사실 및 정책 쟁점의 부차화
해석 수준	음모 서사형	은폐·조작·공모의 서사로 자료와 비판을 포괄적으로 설명	반증 불가능한 연결, 반론을 공모의 증거로 해석	언론·연구·제도에 대한 포괄적 불신
관계적 수준	동기 공격형	주장보다 발화자의 소속·동기·충성심을 문제 삼음	친북, 반인권, 위선, 선동, 냉전세력 등의 낙인어	발화 자격의 부정과 속의 약화
관계적 수준	정체성 비정상화형	상대 집단 전체를 안보 또는 인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	집단 전체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일반화	정서적 양극화와 상호인정의 약화

출처: Habermas(1996), Wardle and Derakhshan(2017), Tucker et al.(2018) 및 본문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사례선정과 자료의 범위

본 연구는 북한 인권 관련 온라인 담론 전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쟁 장면에서 정보와 맥락의 왜곡이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살펴보는 탐색적 질적 사례분석이다. 사례는 목적표집 방식으로 선정하며,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이어야 한다. 둘째, 정책문서, 증언, 국제기구 보고서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원자료가 국내 공론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실과 정책의 검토가 발화자의 의도와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석 사례는 ① 북한인권보고서 및 대북정책 논쟁, ② 탈북민 증언의 수용·검증·대표성 논쟁, ③ 국제기구 북한 인권보고서의 국내 정치적 번역과 수용으로 구성한다.¹⁶⁾ 세 사례는 각각 제도와 정책, 경험적 증언, 국제규범 및 전문자료라는 서로 다른 정보 유형을 대표한다. 사례 선정의 목적은 특정 사건이나 발언의 진위를 판정하는 데 있지 않으며, 상이한 자료 유형이 국내 공론장에서 안보화·도덕화·정파화되고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비교하는 데 있다.

16) 박한식·손광주. 2012. 『북한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분석 대상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문서, 정당의 공식 논평, 시민사회단체의 성명과 자료, 언론 기사와 사설, 공개 인터뷰와 영상, 카드뉴스와 해설 콘텐츠 등이다. 댓글과 공유 문구는 개별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를 일반화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원자료가 어떠한 언어와 형식으로 요약·재구성되는지를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특정 플랫폼의 전체 게시물이나 댓글을 전수 수집하여 빈도와 인과효과를 검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분석의 결과는 북한 인권 관련 온라인 담론 전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일반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논쟁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프레임과 담론적 경로에 관한 해석적 주장으로 한정한다.

〈표 2〉 사례별 분석 초점과 비교기준

사례	핵심 쟁점	주요 정보원	분석 초점
북한인권보고서·대북정책 논쟁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압박·관여·교류 정책의 관계	법률 및 정책문서, 국회자료, 정당 논평, 시민사회 성명, 언론 보도	정책수단의 차이가 도덕적·정파적 이분법으로 전환되는 경로
탈북민 증언 논쟁	증언의 신뢰성, 검증 가능성, 경험의 대표성	공개 증언, 인터뷰, 보도기사, 영상, 반응문	개별 증언의 검토가 증언의 절대화 또는 탈북민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경로
국제기구 보고서 수용	국제인권 규범, 조사방법, 정책 권고와 국내 대북정책의 관계	국제기구 보고서, 관련 결의와 권고, 국내 언론 보도, 정당·시민사회 해설	원자료의 복잡성과 한계가 국내 정파적 프레임으로 축약되는 경로

출처: 본 연구의 사례선정 기준과 분석 초점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분석 절차와 해석 기준

사례분석은 네 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각 사례에서 제기되는 1차적인 사실·자료·정책 쟁점을 확인한다. 둘째, 해당 쟁점이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언어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정보 수준과 해석 수준의 왜곡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결합하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왜곡이 발화자의 동기와 자격을 문제 삼는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되고, 정책 대안의 비교와 반론 가능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약하는지를 해석한다.

국가 생존, 위협, 체제 방어, 안보 무능과 같은 표현은 안보화의 주요 지표로 본다. 인권 외면, 반인권, 위선, 비도덕성처럼 정책 차이를 선악의 문제로 환원하는 표현은 도덕화의 지표로 파악한다. 친북, 중북, 냉전세력, 정치적 선동처럼 발화자를 특정 정치진영과 결부하여 주장 자체를 무효화하는 표현은 정파화와 관계적 메타담론의 지표로 본다.

다만 특정 표현의 등장만으로 분석 범주를 기계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표현도 사용된 맥락과 기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표현이 정책의 효과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상대의 주장 전체를 발화자의 정체성만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원자료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명시한 비판은 정보 왜곡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반대 입장의 근거를 소개하고 이에 응답하는 경우에는 관계적 메타담론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는 북한 인권 논쟁의 메타담론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공개자료, 민간 인권기록 데이터베이스, 국제기구 보고서, 여론조사 자료, 그리고 국내 정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를 교차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의 자료 설명, NKDB의 기록 추적 현황, OHCHR의 COI 및 후속 보고, 한국리서치의 대북인식조사, 그리고 한국 정치 양극화 및 미디어 선택적 노출 연구를 활용하여, 북한 인권 의제가 국내 공론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정파화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절차는 앞서 제시한 두 분석 명제와 직접 연결된다. 제1·2단계에서 사실·정책 쟁점이 안보화·도덕화·정파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제4단계에서 그 결과가 상대 진영의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명제 1을 분석한다. 명제 2는 제3단계에서 나타나는 맥락 삭제·과잉 일반화와 의도·배후 추정의 결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제4단계에서 그러한 결합이 발화자의 동기와 발화 자격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세 사례에 동일한 분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사례별 차이뿐 아니라 두 명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로와 그 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IV. 북한 인권 논쟁의 메타담론화와 사례분석

1. 북한인권보고서와 대북정책 인식 논쟁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내 논쟁은 단순히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 차이에 머물지 않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결합하면서 정파적 대립의 성격을 띠

게 된다. 특히 북한 인권 의제는 인도주의, 안보, 남북관계, 국제규범이 중첩되는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를 두고도 어떤 행위자는 이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읽고, 다른 행위자는 대북 압박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읽는다. 이러한 해석의 분기 자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자료의 내용과 정책 효과를 비교하는 논의가 곧바로 상대 진영의 동기와 정체성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이 점은 북한 인권 관련 정보의 사회적 수용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리서치의 2023 대북인식조사에 따르면,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59%였고,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시민이 북한 인권 문제를 판단할 때 보고서 전체의 조사방법과 구체적 내용을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언론보도, 정당 논평, 온라인 해설과 같은 2차적 정보경로를 통해 이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은 원자료 접근성이 그 자체로 정보 왜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보고서의 조사범위와 한계, 개별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특정 정책적 결론만이 강조될 때 발생한다. 예컨대 동일한 북한 인권자료도 한쪽에서는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다른 쪽에서는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한 정치적 의제화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차이 자체는 정상적인 정책경쟁에 해당한다.

그러나 논쟁이 ‘어떤 정책수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쪽은 대북 적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반대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쪽은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식으로 상대의 동기와 도덕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논쟁의 성격은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는 보고서의 내용과 정책수단의 효과보다 ‘누가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가 쟁점이 되며, 정책논쟁이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명제 1은 북한 인권이라는 정책 쟁점이 안보와 도덕의 언어를 거쳐 특정 진영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또한 보고서 전체의 조사범위와 조건보다 일부 내용 또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만이 강조되고, 그것이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는 방식과 결합할 경우 명제 2의 경로 역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로가 모든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논쟁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넘어선다.

2. 탈북민 증언의 수용·검증·대표성 논쟁

탈북민 증언은 북한 인권 실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자료이지만, 동시에 국내 공론장에서 가장 강한 감정적 반응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탈북민 증언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개별 서사의 극적 성격이 아니라, 증언 자료가 어떤 규모와 절차 속에서 축적되고 있는가이다. 통일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설명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2023년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더해 2023년에 새롭게 조사된 탈북민 141명의 증언을 합친 총 649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서술이 단일 증언이나 상징적 사건 몇 건이 아니라, 누적된 면접 자료 위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⁷⁾

민간 차원의 자료 축적도 유사한 방향을 보인다. NKDB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3년 이후 2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면접해 왔으며, 2024 북한인권백서를 기준으로 143,769건의 인권침해 사례 및 관련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24 북한인권백서는 총 400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에 사건 및 인물 개요 통계자료와 사건유형별 인권침해 통계자료를 별도로 제시한다. 이 같은 자료 축적 규모는 탈북민 증언이 단순한 개인 일화의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분류체계와 기록 절차를 가진 데이터 자원으로 발전해 왔음을 시사한다.¹⁸⁾

그럼에도 탈북민 증언이 공론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누적 자료가 갖는 이러한 성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개별 증언과 전체 북한 사회 사이의 대표성 범위가 삭제되는 경우이다. 특정 시기·지역·기관에서 경험한 인권침해에 관한 개별 증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실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경험의 시간적·공간적 조건을 제거한 채 이를 북한 사회의 모든 시기와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으로 확대하면 개별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잉 일반화가 된다. 이 경우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경험’이라는 원자료의 성격이 ‘북한 사회 전체의 본질’에 관한 진술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반대 방향에서 나타난다. 특정 증언자의 일부 진술에서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해당 인물이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증언과 기

17) 공공데이터포털. 「통일부_북한인권보고서_20240627」, 통일부 제공, <https://www.data.go.kr/data/15129636/fileData.do?recommendDataYn=Y>

18) NKDB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24. 「2024 북한인권백서」, https://nkdb.org/publication/?bmode=view&id_x=121771392; NKDB, 기관 소개 페이지, <https://nkdb.org/>

록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탈북민 증언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경우이다. 개별 증언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그 자체는 정보 왜곡이나 메타담론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증언의 문제를 근거로 상이한 시기와 지역에서 축적된 다수의 증언까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면 ‘한 증언의 검증’이 ‘전체 증언 집단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된다.

두 방향은 정치적 입장은 상반되지만 담론구조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전자의 경우 개별 경험의 범위가 삭제되면서 ‘일부의 경험→북한 전체의 본질’이라는 과잉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후자의 경우 특정 증언의 오류 또는 발화자의 특성이 ‘개별 증언의 문제→탈북민 증언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된다. 특히 후자의 논쟁이 증언 내용의 교차검증에서 벗어나 발화자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치세력과 가까운지, 어떠한 동기로 증언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정보 수준의 논쟁은 발화자의 자격에 관한 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이동한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가 649명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고, NKDB가 2만 명 이상을 면접하여 143,769건의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증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의 존재는 개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정 발화자의 정치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시기·지역·기관·사건유형별로 다른 증언 및 기록과 교차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명제 2는 ‘개별 자료의 맥락 축소 또는 과잉 일반화→발화자의 정치적 의도 추정→증언 내용보다 발화자의 신뢰성과 자격을 둘러싼 논쟁의 확대’라는 경로를 통해 관찰된다. 그러나 위의 자료들을 고려하면, 보다 적절한 접근은 증언을 영웅화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진술을 시기·지역·기관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다른 증언 및 국내외 보고서와 교차 검토하는 것이다. 즉 탈북민 증언 논쟁의 핵심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검증 규칙 아래 누적 자료를 읽을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절차적 검증 대신 발화자의 동기나 정체성을 먼저 문제 삼을 때, 공론장은 사실판단의 공간에서 정체성 충돌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3. 국제기구 북한 인권보고서의 국내 정치적 번역

국제기구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국내 정파가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외부 권위의 장식물이 아니라, 독립적 조사 메커니즘과 장기적 기록 작업의 산물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를 설치하면서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동의 자유, 강제실종 등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피해자와 생존자, 목격자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공개청문회를 통해 자료를 문서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일정한 조사범위와 절차적 기준을 갖는 자료임을 보여준다.¹⁹⁾

국제기구 자료의 연속성은 2025년 OHCHR 보도자료에서도 재확인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4년 COI 이후의 상황을 다룬 2025년 보고서와 관련하여,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는 북한이 더욱 폐쇄적인 사회가 되었고, 감시와 통제가 생활 전반에서 강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의 지속, 강제노동, 납치·강제실종 피해자 문제, 식량권 침해 등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⁰⁾

이처럼 국제기구 자료는 특정 시점의 단발성 고발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분리된 조사 메커니즘이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반복 확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보고서가 국내 공론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보고서가 제시한 사실판단과 조사상의 한계, 정책적 권고가 동일한 비중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기구 보고서는 조사 대상, 증언의 성격, 접근의 제약,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와 정책 권고를 구분하여 제시하지만, 국내 정치적 논쟁에서는 이 가운데 특정 문장이나 결론이 분리되어 국내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재배치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를 지적하는 사실판단이 곧바로 특정한 대북정책 하나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반대로 국제기구 자료를 정책적 압박의 산물로 간주하여 보고서 전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다면 국제기구가 제시한 사실판단과 국내 정책선택 사이의 논리적 단계가 축소된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책적 해석 자체를 왜곡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국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재 강화와 외교적 관여 등 서로 다른 정책적 결론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원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특정 정책선택만을 ‘유일하게 도덕적인 선택’으로 제시하거나, 반대 입장을 해당 보고서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규

19)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commission-inquiryon-h-rin-dprk>

20)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DPRK: UN report finds 10 years of increased suffering, repression and fear,” 12 September 2025,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5/09/dprk-un-report-finds-10-years-increased-suffering-repression-and-fear>

정할 때이다. 이 경우 국제기구 자료의 내용에 관한 논쟁은 상대 진영이 인권을 외면하는지 또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판단하는 메타담론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국제기구 보고서 사례는 원자료의 복합성이 국내 공론장에서 선택적으로 축약되고, 그 축약된 정보가 정파적 정책해석과 결합하면서 사실의 검토보다 진영의 도덕성과 정치적 의도를 판단하는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국제기구 북한 인권보고서는 사실의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국내 정치의 번역 경쟁이 벌어지는 대상이 되며, 바로 그 번역 과정에서 정보의 맥락이 삭제되고 메타담론이 강화된다.

4. 사례 비교: 메타담론이 정체성 갈등으로 전환되는 경로

위의 세 사례를 종합하면, 북한 인권 논쟁의 양극화는 북한 인권 문제 자체의 특수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그 문제를 둘러싼 국내 공론장 구조와 정보 유통 방식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탈북민 증언,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자료는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일정한 기록 절차와 누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공론장에서는 자료의 생산 절차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는 대신, 그 자료가 어느 진영에 유리한가가 선행적으로 질문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판단은 점차 관계판단으로 이동하고, 정책논쟁은 상대 진영의 숨은 의도와 도덕성을 문제 삼는 정체성 갈등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 정치 전반의 양극화 구조와도 연결된다. Han은 한국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자연어처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 엘리트 간 양극화가 시기별로 등락을 보였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20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고한다. 특히 20대 국회의 평균 양극화 수준은 0.7043으로 제시되며, 법안 처리율도 약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정파적 대립이 단순한 감정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비효율과 의회 교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¹⁾

미디어 환경 역시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한국의 고선택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이 소비하는 미디어 레퍼토리의 동질성이 클수록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평균 미디어 관련성(AMR)과 정치적 양극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며(계수 1.073, $p < 0.05$), 동질적 매체 소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극화된 정치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 인권처럼 이미 감정적·정체성적 함의가 큰 이슈가 동질적 정보환경 속에서 소비될 경우, 사실의 세부 내용보다 기

21) Han, Seungwoo. 2022. "Elite Polarization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odel,"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2, No.1, 45-72.

존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²²⁾

〈표 3〉 북한 인권 논쟁의 메타담론화 경로; 사례 비교

사례	확인 가능한 핵심 자료	자료가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	공론장 번역 방식	메타담론 전환 결과
북한인권 보고서·대북정책	한국리서치 2023 대북인식조사	북한인권보고서 인지도 낮음(59% ‘잘 모름’), 공개 평가는 긍정 46%, 부정 19%	원자료보다 정당·언론·커뮤니티 해석 경로를 통해 수용	정책 효과 논쟁이 상대 진영의 안보관·도덕성 평가로 이동
탈북민 증언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설명, NKDB DB·백서	통일부 649명 진술 기반, NKDB 2만명 이상 면접·143,769건 DB	개별 증언의 과잉 일반화 또는 일부 불일치를 근거로 전체 신뢰성 부정	증언 내용검증보다 발화자의 동기·자격 공격이 중심화
국제기구 보고서	OHCHR COI, OHCHR 2025 보고 관련 자료	COI는 공개청문회·증언수집 기반, 2025 OHCHR은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악화” 평가	보고서 전체 맥락보다 일부 문장만 정파적으로 발췌·재맥락화	국제규범 자료가 사실 검토보다 진영 정당화 자원으로 소비
사례 비교 종합	Han(2022), KimChoi Lee(2026)	한국 정치 엘리트 양극화 심화, 동질적 미디어 소비가 양극화와 정적 관계	정파 경쟁과 선택적 노출이 북한 인권 이슈 번역을 강화	사실 논쟁이 정체성 갈등과 정서적 양극화로 고착

출처: 한국리서치(2023); 공공데이터포털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설명(2024); NKDB(2024); OHCHR(2013/2025); Han(2022); Kim, Choi, and Lee(20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위의 비교에서 확인되듯이 세 사례의 자료 유형과 생산 주체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료→선택적 해석과 프레임화→정파적 의미 부여→관계적 메타담론’이라는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두 분석 명제가 세 사례에서 동일한 방식과 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인권보고서와 대북정책 논쟁에서는 정책수단의 차이가 안보와 도덕의 언어를 거쳐 진영의 정체성 평가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명제 1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탈북민 증언 논쟁에서는 개별 진술의 맥락과 대표성 문제가 과잉 일반화 또는 전체 증언군에 대한 신뢰성 부정으로 확대되고, 다시 발화자의 동기와 자격 문제로 이동

22) Kim, Keungoui, Yunwoo Choi, and Changjun Lee. 2026. “Selective Media Exposure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a High-Choice Media Environ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 13, Article 678.

한다는 점에서 명제 2의 경로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국제기구 보고서의 국내 수용에서는 원자료의 조사과정과 한계가 축약된 뒤 국내의 대북정책 및 정파적 프레임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두 명제가 중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분석 명제가 모든 사례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각 사례에서 어느 단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북한 인권 자료의 성격에 따라 메타담론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사례비교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 논쟁의 양극화는 단순히 정보의 진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선택적으로 인용되고 어떤 정체성 프레임에 결합되는가에 의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메타담론화는 북한 인권 논쟁을 정책 논쟁에서 정체성 갈등으로 이동시키는 핵심 매개로 기능한다.

V. 민주주의 공론장에 대한 합의와 제도적 대응

1. 인지적·정서적·제도적 효과

북한 인권 담론을 둘러싼 양극화는 인지적·정서적·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공론장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인지적 차원에서는 사실판단의 공동 기반이 약화된다. 서로 다른 정보원과 상반된 메타담론에 의존하는 집단은 동일한 자료를 접하고도 상이한 현실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한계와 해석의 차이를 검토하기보다, 자료를 제시한 주체가 어느 정치진영에 속하는지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사실의 내용보다 발화자의 정체성이 우선될수록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는 축소된다.

둘째, 정서적 차원에서는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확대된다. 논쟁의 초점은 북한 주민의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서 누가 더 위협하고 위선적인 집단 인지를 판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상대 집단은 다른 정책수단을 선호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타자로 표상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복수의 가치와 정책수단을 조정해야 하는 북한 인권 의제에서 특히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 상대를 협상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할수록 부분적 합의와 공동의 사실 확인은 어려워진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책 선택과 조정의 공간이 축소된다. 북한 인권정책은 기록

화, 국제공조, 정보 접근, 인도적 지원, 제재, 외교적 관여 등 서로 다른 정책수단의 결합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론장이 강경과 유화, 인권과 평화의 이분법으로 조직될 경우 복합적 접근은 양쪽 진영으로부터 배신이나 위선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와 정당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보다 진영 내부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선명한 입장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다원적인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여 공적 판단을 형성하는 체제라면, 진영 확인형 공론장은 대표자가 조정자보다 정파적 대립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성은 절차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상이한 이해관계와 정책대안을 조정하는 실질적 기능은 약화된다. 특히 정책 선호의 차이를 넘어 상대 진영의 존재와 발화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사이의 균형을 형성해야 할 대의제도의 기능도 빈약해질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 보호의 균형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확대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은 국가안보, 외교, 통일정책과 연결된 민감한 의제이므로, 허위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할 경우 정부나 정치적 다수파가 불편한 비판과 소수의견을 허위정보로 규정할 위험이 있다. 특히 사실의 오류와 논쟁적인 해석,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발화자에 대한 공격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규제는 정보환경의 개선보다 표현의 위축과 정치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 현대정치 경험은 안보 관련 법과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는 국가가 진실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적 비판 능력을 보장하면서 정보의 출처와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²³⁾

반대로 조직적인 조작, 반복적인 맥락 삭제, 발화자의 자격을 부정하는 낙인을 전면적으로 방임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적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의 충돌을 보호하는 원리이지만, 반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상대를 토론 가능한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무제한 정당화하는 원리는 아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과제는 특정 주장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지 않다. 정보의 출처와

23)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선거 경쟁의 정례화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적 비판 능력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이 점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절차적 장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를 정정하며, 당사자와 반대 입장이 설명과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3. 다층적 대응의 원리

북한 인권 담론의 정보 왜곡과 정파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수단보다 사실검증, 맥락정보, 플랫폼 절차, 반론권, 시민교육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사실검증 인프라는 국가 독점형이 아니라 다기관 협력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처럼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의제에서는 어느 한 기관의 판단만으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 정부,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탈북민 당사자가 보유한 자료를 교차 검토할 수 있는 개방형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 기관이 최종적인 진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자료와 판단 기준, 검증 경로,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다.

둘째, 요약 콘텐츠와 원자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짧은 영상, 카드뉴스, 기사 제목과 요약문이 원문, 조사방법, 시간적 범위, 상반된 해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면 맥락 삭제와 과잉 일반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탈북민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는 일부 인용문만을 분리하여 유통하기보다, 해당 자료가 포괄하는 경험과 시기의 범위, 조사상의 한계, 교차 검증 가능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플랫폼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추천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업상 권리와도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추천·제한·삭제·신고 처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어떠한 콘텐츠에 맥락정보나 경고가 부착되는지, 신고와 이의제기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반복적으로 오류가 확인된 콘텐츠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관한 설명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는 플랫폼에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가시성이 형성되는 조건을 이용자가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공적 반론권과 정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차단과 삭제보다 정정, 설명, 반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맥락이 삭제되거나 일부 발언이 왜곡되어 유통된 경우 원자료와 전체 맥락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이 최초의 왜곡된 정보보다 현저히 낮은 가시성을 갖지 않도록 정정과 반론의 연결 방식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민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사실확인 기술을 넘어 메타담론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포함해야 한다. 시민은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가 어떠한 맥락을 삭제했는지,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의도와 배후를 단정하고 있는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발화자에 대한 낙인으로 전환되었는지, 원자료와 반론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북한 인권 의제를 특정 진영의 정체성 경쟁에서 분리하고 정책대안의 비교를 복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다.

4. 북한 인권 담론의 탈정파화와 정책적 상상력

북한 인권 의제의 탈정파화는 인권을 가치중립적인 문제로 만들거나 인권침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약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북한 인권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책임, 정책수단의 선택을 포함하는 정치적 의제이다. 탈정파화가 의미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특정 정치진영의 상징적 자원으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비교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정책적 이견을 금지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론장이 이러한 복잡성을 수용할 때 북한 인권정책은 진영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조합의 경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책수단이 어떠한 인과 가정에 근거하며, 어떤 조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정책 실패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근거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는 행위가 배신이나 위선으로 간주되지 않는 토론 환경도 필요하다.

결국 북한 인권 담론의 질은 대북정책의 강경성이나 특정한 정책수단의 채택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접근이 제한된 정보와 가치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반대자를 어느 범위까지 공적 토론의 주체로 인정하는지, 플랫폼화된 정보환경에서 민주주의의 속의 조건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인권 논쟁은 북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논쟁인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가 자신의 공론장과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관한 자기 성찰의 문제이기도 하다.

5. 단계적 이행과 정책 우선순위

이상의 대안은 동시에 완결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비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기적 과제, 중기적 제도화

과제, 장기적 공론장 개선 과제로 구분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원자료 접근성과 정정·반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통계를 공개할 때 요약문에서 원자료, 조사방법, 조사시기와 대상, 자료의 한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과 플랫폼에서도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새로운 규제기관의 설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잘못된 인용이나 맥락 삭제가 확인된 경우 원자료와 정정·반론을 동일 콘텐츠에서 연결하는 절차 역시 비교적 단기간에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중기적 과제로는 다기관 협력형 사실검증과 플랫폼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과 같이 직접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정부기관의 단독 판단보다 언론·학계·시민사회·국제기구와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자료의 일치 여부와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플랫폼 역시 콘텐츠의 진위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맥락정보의 부착, 정정과 이의제기, 반복적 오류에 대한 처리원칙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절차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시민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북한 인권 의제의 탈정파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정보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기술교육을 넘어, 선택적 인용과 과잉 일반화, 근거 없는 의도 추정, 발화자의 정체성을 통한 주장 무효화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정책을 강경·유화 또는 친북·반북의 이분법으로 평가하기보다 기록화, 국제공조, 인도적 지원, 정보 접근, 외교적 관여 등 복수의 정책수단이 어떠한 조건에서 효과를 갖는지를 비교하는 공론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새로운 규제의 확대가 아니라 원자료에 대한 접근성, 출처와 맥락의 투명성, 정정과 반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보 왜곡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이후 다기관 검증체계와 플랫폼 절차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정보 해석 역량과 정파적 갈등구조의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인권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론장 양극화로 전환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인권 문제가 그 자체로 정서적 양극화를 직접 산출한다기보다, 관련 정보가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프레임을 거쳐 해석되고, 그 결과 논쟁의 초점이 사실과 정책 대안의 비교에서 발화자의 의도·정체성·도덕성을 판단하는 메타담론으로 이동할 때 공론장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공론장, 정보 무질서,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논의를 결합하고, 북한인권보고서와 대북정책 인식 논쟁, 탈북민 증언의 수용·검증 논쟁, 국제기구 북한 인권보고서의 국내 정치적 번역이라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질적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관심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실체 자체를 판정하는 데 있다기보다, 그 문제를 둘러싼 정보가 국내 공론장 안에서 어떠한 의미 경쟁과 정체성 경쟁의 자원으로 사용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 인권 관련 정보는 공론장에 진입하는 순간 단순한 사실 자료로 머무르지 않고, 안보 위협의 언어, 도덕적 심판의 언어, 정파적 귀속의 언어를 통해 재맥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단의 차이는 점차 선악과 충성의 문제로 번역되고, 정책적 이견은 상대 진영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판정하는 갈등으로 이동한다. 둘째, 탈북민 증언이나 국제기구 보고서와 같이 원래는 사실 확인과 기록 축적의 자료로 기능해야 할 정보들조차, 국내 정치적 맥락 속에서는 개별 진술의 과잉 일반화 또는 발화자 자체의 신뢰성 공격이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소비되면서 메타담론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북한 인권이라는 의제의 특수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정파 경쟁이 심화된 정치 환경과 선택적 정보 소비가 강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북한 인권 논쟁을 단순히 이념 대립이나 남북관계 인식의 차이로만 환원하지 않고, 정보 왜곡과 메타담론화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기존의 북한 인권 연구가 주로 인권 실태 자체, 대북정책의 방향, 국제사회의 규범적 대응에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그 의제가 국내 공론장 안에서 어떠한 담론적 경로를 통해 정서적 양극화와 결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초점을 한 단계 이동시킨다. 특히 본 연구는 정보 왜곡을 단순한 허위 정보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맥락 삭제, 선택적 인용, 과잉 일반화, 동기 공격, 발화 자격의 문제화 등 관계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공론

장 양극화가 사실의 진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누구의 말로 유통되는가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공론장의 위기는 단지 정보의 부족이나 오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정체성 경쟁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또한 북한 인권 논쟁이 자료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기록과 보고서, 증언, 조사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공론장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고 소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자료 설명, NKDB의 장기 기록 축적, OHCHR의 COI 및 후속 보고는 북한 인권 관련 정보가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기록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국내 공론장에서는 이러한 축적된 자료의 맥락과 검증 절차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어느 정치적 입장에 유리한가가 먼저 쟁점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사실 자료는 공통의 토론 기반이 되기보다, 각 진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거나 상대 진영의 위선을 폭로하는 상징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 논쟁의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불일치의 심화가 아니라, 자료를 둘러싼 해석 경쟁이 발화자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겨냥하는 메타담론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공론장의 분열이 ‘무엇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누가 말하고 있는가’와 ‘그 말이 어떤 진영적 위치 속에서 이해되는가’라는 질문과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실천적 함의도 갖는다. 북한 인권 논쟁의 민주적 관리는 어느 한 입장을 도덕적으로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첫째, 사실 검증의 주체를 다원화하고, 둘째, 원자료와 해석 정보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며, 셋째, 정파적 의미 부여 이전에 기본적 사실 판단이 공유될 수 있는 공론장 절차를 복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 의제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이나 더 큰 감정적 동원이 아니라, 자료가 생산·유통·해석되는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이한 해석들이 공통의 사실 기반 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규범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인권 논쟁을 둘러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현 가능성과 제도화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원자료 접근성과 맥락정보 제공, 정정·반론 절차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다기관 협력형 사실검증과 플랫폼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북한 인권 의제의 탈정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정보규제를 확대하기보다 출처·맥락·반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최

소화하면서 공론장의 사실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논쟁 장면을 중심으로 메타담론화의 경로를 해석한 탐색적 질적 사례분석이며, 특정 플랫폼의 게시물과 댓글을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빈도와 인과효과를 측정하지 않았다. 또한 메타담론이 실제 이용자의 감정, 신뢰, 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검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안보화·도덕화·정파화의 경로는 설명적·해석적 타당성을 갖지만, 이를 일반화된 인과 명제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플랫폼별 텍스트 자료와 댓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둘째, 여론조사 및 실험설계를 통해 메타담론의 정서적 효과를 측정하며, 셋째, 북한 인권 이외의 안보·인권 의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설명틀이 가지는 적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업이 뒤따를 때, 북한 인권 논쟁의 공론장 양극화가 갖는 구조적 성격과 그 민주주의적 함의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북한 인권 논쟁을 찬반의 이념 대립으로만 이해하는 접근을 넘어, 정보 왜곡, 정파적 번역, 공론장 구조가 결합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숙의적 조건을 재검토하는 하나의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단지 어느 입장이 더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사실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상이한 해석을 어떠한 절차 속에서 경쟁시킬 것인가, 그리고 정체성 공격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인권 논쟁은 특정 정책 영역의 갈등을 넘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공론장 위기의 축소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북한 인권 논쟁을 민주주의 공론장 연구의 한 사례로 위치시키며, 향후 보다 정교한 실증 연구와 규범 이론의 결합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박한식·손광주. 2012. 『북한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 북한인권기록보존소(NKDB). 2024. 「2024 북한인권백서」
- 오일석. 2024. “딥페이크(DeepFake)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왜곡과 대응 방안,” 『전략보고』, 제26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유은식·김경미. 2023. “한국의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위기: 역사적 배경,” 『한국정치연구』, 제32권 4호, 한국정치연구소.
- 임혁백. 2007.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항의의 정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0권 3

호, 아세아문제연구소.

임혁백. 2009a.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4호, 한국정치학회.

임혁백. 2009b.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OUGHTOPIA』, 제24권 1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임혁백. 2011.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3김 정치시대와 그 이후』,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최장집.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통일부. 2024. 「통일부_북한인권보고서_20240627」,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리서치. 2023. 「[2023 대북인식조사]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 방향성」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디지털 뉴스 이용과 신뢰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Bakshy, Eytan, Solomon Messing, and Lada A. Adamic. 2015.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348(6239).

Dahl, Robert A.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Entman, Robert M. 2004. *Projections of Power: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bermas, Jürgen.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ambridge: MIT Press.

Han, Seungwoo. 2022. “Elite Polarization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odel,”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2, No.1.

Kim, Keungoui, Yunwoo Choi, and Changjun Lee. 2026. “Selective Media Exposure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a High-Choice Media Environ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 13, Article 678.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5.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5. “DPRK: UN report finds 10 years of increased suffering, repression and fear,”

Sunstein, Cass R. 2017.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ucker, Joshua A., Andrew Guess, Pablo Barberá, Cristian Vaccari, Alexandra Siegel, Sergey Sanovich, Denis Stukal, and Brendan Nyhan. 2018. “Social Media, Political Polarization, and Political Disinformation: A Review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Hewlett Foundation Working Paper.

Wardle, Claire, and Hossein Derakhshan.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Making*,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Young, Iris Marion.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Public Sphere Polarization in Debat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formation Distortion and Partisan Conflict

Lee, Juhee

This article examines how information distortion and partisan conflict intensify public sphere polarization in South Korean debat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t argues that polarization is not produced by the issue itself, but by the way related information is interpreted through the frames of securitization, moralization, and partisan framing, and then transformed into meta-discourse that questions the speaker's intentions, identity, and legitimacy. To explain this process, the article brings together discussions o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information disorder, and affective polarization. It qualitatively analyzes three recurring sites of controversy: debates ov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ports and public perception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disputes over the reception and verifi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testimoni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The analysis shows that when these mechanisms overlap, policy disagreement shifts from deliberation over alternative measures to identity-based conflict centered on the moral legitimacy of opposing camps. The article concludes that mitigating such polarization requires more than normative appeals; it calls for multi-institutional fact-checking, stronger links between contextual information and original sources, greater procedural transparency of platforms, civic media literacy, and the de-partisaniz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 public issue.

Key Words : North Korean human rights debate, public sphere polarization, information distortion, partisan conflict, meta-discourse, affective polarization

• 논문투고일 : 2026년 7월 18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6년 8월 09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8월 09일

